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15
2023/08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영길 | **감수** 목진용, 남정호 | **담당** 민영훈 Email: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 · 해양법 연구실(051-797-4730)

Contents

국제법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2
ITLOS, 기후변화 및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회가 요청한 권고적 의견 청문 절차 진행

국제기구

국제해저기구(ISA) ····· 4
심해저 자원 개발에 관한 법적 분쟁, 불확실한 국면 진입

지역별 동향

아시아 ····· 7
일본 일본-호주 부대간 협력 원활화협정 발효로 안보협력 강화
일본 방위성, 2024년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요구 예산 공개
중국 중국 쉐룽 2호 북극 생태계 조사…14번째 북극해 항행
중국 제3회 중국-아프리카 평화안전포럼 개최…해양안보 협력 강화키로
필리핀 필리핀, 서필리핀해 관련 상원결의안 채택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의 해양경계획정 법안 발의

중동 ····· 23
이집트 이집트, 수에즈만에서 새로운 유전 개발

태평양도서국 ····· 24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PNG) 대법원 PNG-미국 안보협정 적법성 검토
팔라우 팔라우, 미국과 해상보안에 관한 새로운 협정 체결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 30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연구원 김 민

ITLOS, 기후변화 및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회가 요청한 권고적 의견 청문 절차 진행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회(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이하 '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적 의견 요청에 대한 ITLOS의 청문 절차(Public hearing)가 9월 11일 오전 10시 재판소 본관에서 개시되었다. 앞선 6월 30일 자 명령에 따라 35개국과 3개의 비국가단체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청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표 1. 청문절차 일정표

일정	참가국 또는 단체
9/11	
10:00-10:15	개회
10:15-13:00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회
15:00-18:00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회
9/12	
10:00-13:00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회
15:00-18:00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회
9/13	
10:00-13:00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15:00-18:00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9/14	
10:00-13:00	칠레, 포르투갈, 지부티
15:00-18:00	과테말라, 인도, 나우루
9/15	
10:00-13:00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모리셔스, 미크로네시아
15:00-18:00	뉴질랜드, 대한민국, 중국
9/18	
10:00-13:00	멕시코, 모잠비크, 노르웨이
15:00-16:00	벨리즈
9/19	
10:00-13:00	필리핀, 시에라리온
15:00-16:00	싱가포르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9/20	
10:00-13:00	동티모르, EU, 베트남
15:00-16:30	베트남, 태평양 커뮤니티(SPC)
9/21	
10:00-13:15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국제자연 및 천연자원보전연합
15:00-16:00	아프리카 연합
9/25	
10:00-13:30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2022년 12월 12일, 위원회는 ITLOS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위원회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 대기 중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양 온난화,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 해로운 영향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해양 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를 포함한 기후 변화 영향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하여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림 1. 소도서국 위원회 대표단



그림 출처: ITLOS

출처 : [1] ITLOS, 2023년 9월 8일, Press Release

국제해저기구
ISA

전문연구원 민영훈

심해저 자원 개발에 관한 법적 분쟁, 불확실한 국면 진입

2023년 ISA 이사회의 개발 규정 채택 실패

지난 7월 자메이카 킹스톤에서 개최된 ISA 이사회는 심해 채굴에 대한 허가와 해저 광물 개발을 위한 개발규정 초안 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지난 7월 ISA 이사회는 나우루가 2021년 제기한 이른바 '2년 규칙'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이번 회기에서 심해저 광물 개발에 관한 개발규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ISA 사무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협정 부속서 제1조제15항b호에 따라 개발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발 작업 계획을 채굴업자들로부터 신청받아 잠정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이사회에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제28차 ISA 이사회는 환경영향에 관한 불확실성과 이익배분 및 기타 주요 규정에 관한 합의 실패로 개발규정 초안을 채택에 이르지 못 했다. ISA 이사회는 금번 회기 종료시 2025년까지 개발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채택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이러한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여전히 협상에 관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개발규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2025년에 구속력 있게 마무리 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심해저 개발 업체 중 하나인 메탈컴패니(Metals Company)는 2024년에 ISA에 심해저 개발 계획을 신청하기는 계획을 발표했다.

심해저 자원 개발과 녹색경제

현재 많은 국가들이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에너지 운송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요에 비해 육상에서의 자원 개발은 불안정하기만 한 상황이다. 특히, 전기 자동차의 필수 부품인 배터리를 개발 및 제작하는 데에는 코발트, 니켈, 마그네슘 등이 대량으로 필요한데, 이러한 광물을 최대로 공급하는 콩고는 내정이 불안하고 공공 부패 문제가 만연해 있어 자원의 공급이 불규칙하고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콩고에서 이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동자 및 아동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미래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희소 광물인 풍력 터빈과 같은 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사용되는데 자원 수급의 불균형은 전 세계의 친환경 흐름에 주요한 방해물로 작용하

국제해저기구
ISA

고 있다. 반면 심해저에는 재생에너지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광물인 희토류 등 희귀 광물이 대량으로 산재해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2. 심해저 자원 개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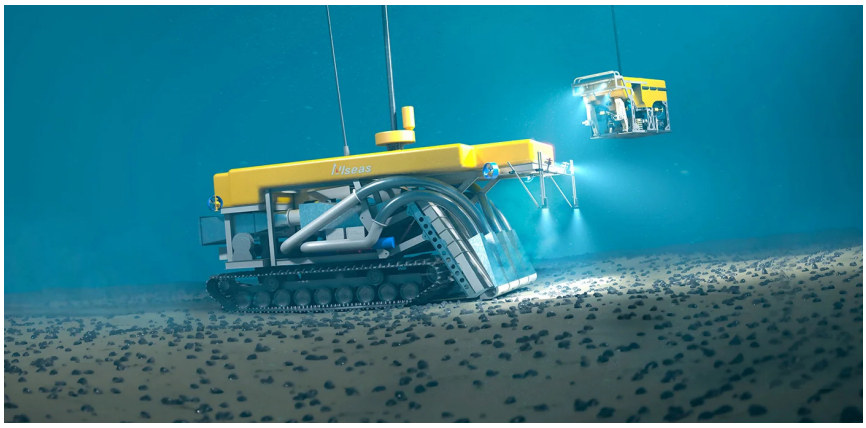


그림 출처: Mining Technology

심해저 자원 개발의 환경적 영향

이러한 경제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해저 광물 개발은 그 환경적 영향의 불확실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해 자원 개발 방법은 심해저 바닥에 위치한 광물 결정들을 긁어 수집한 뒤 해상에 위치한 선박으로 올리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 중 대부분 선박과 심해저 시추시설은 유압펌프를 사용하는데, 이 펌프는 심해에 위치한 해양 하층의 퇴적물을 분산시켜 심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동식물군에 악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심해저 개발활동을 통해 분산된 퇴적물이 대부분 높은 양의 금속과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주변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또한 해양 조류를 타고 멀리 타 심해저 지역까지 옮겨가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퇴적물의 분산 등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영향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독일이 진행한 개발 지역과 분산 퇴적물의 영향에 관한 실험은 심해저 광물 개발의 영향을 받은 인접 심해저 생태계가 수십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심해저 광물 개발이 진행된 지역의 경우 생물학적으로 척박한 상태로 오랜 기간 남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유럽에서 지원한 정부 간 연구패널이 심해저 개발이 시행된 지역의 해저 동식물의 인구 밀도가 눈에 띄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국제해저기구
ISA

심해저 개발규정 부재속 개발의 장단점

심해저 개발 규정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ISA가 심해저 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녹색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시간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30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고, 중국은 2035년까지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사실 현재까지 ISA는 19개의 망간 단괴(Polymetallic nodules) 탐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탐사 계약이 망간 단괴 개발 활동으로 연결될 경우 탐사 지역들만으로 2억 5천만 대 이상의 자동차들을 잠재적으로 전기화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자동차들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시키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메탈컴패니는 밝히고 있다.

반면, 심해저 광물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이 명백하지 않아 환경 단체 들은 심해저 광물 개발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의 실험적 연구들은 심해저 광물 개발이 진행된 지역의 환경 복구가 장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에 관한 실질적인 규제 없이 심해저 광물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조금 먼 미래에 대한 환경 보호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구속력 있는 규제 장치 없이 개발이 진행될 경우, 현재의 ISA 자원을 고려할 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이 자행될 우려가 크다. 왜냐하면 심해저 광물 개발을 개발업체의 약속만으로 심해저 환경 보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 [1] EJIL: Talk, 2023년 8월 22일, The Legal Fight Over Deep-Sea Resources Enters a New and Uncertain Phase [2] Mining Technology, 2022년 12월 15일, Stumbling towards the last frontier: greater hesitancy for deep-sea mining.

아시아

일본

전문연구원 김주형

일본-호주 부대간 협력 원활화협정 발효로 안보협력 강화

8월 8일 일본 자위대와 호주 방위군 간 '상호 접근 및 협력 원활화에 관한 협정'(일-호 부대간 협력 원활화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한 외교 공문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협정은 2021년 1월 6일 서명되었으며, 8월 13일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일-호 부대간 협력 원활화협정은 양국간 호혜적 방위협력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방문부대 및 구성원의 지위를 정하는 '지위 협정'에 해당하며 방위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국은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부대 간 협력이 원활해지고 안보·방위협력 촉진으로 연결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양국이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정은 일본이 미국 이외의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방문군 협정이다. 한편, 호주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미국, 필리핀 등과 지위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일호 부대간 협력 원활화협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일본 F-35는 8월 말 호주 틴달 공군 기지(RAAF 기지 틴달)에 처음으로 배치된다. 호주 F-35는 9월 초 일본에 처음으로 배치되어 부시도 가디언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12월 일본에서 열리는 야마 사쿠라 훈련에 호주군의 150여 명이 처음으로 정식 참가할 예정이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국 간 동반자 관계의 발전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의 틀을 마련해 오고 있다. 2007년 3월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일·호주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래 자위대와 호주 방위군 간 공동훈련이나 재해구조 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2014년 7월 일·호 정상회담에서 양국 부대 간 각종 절차와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정하는 교섭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1월 호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본 협상의 큰 틀에 합의했다. 2022년 1월 6일 양국 총리가 서명했으며, 2022년 10월 새로운 '안보협력에 관한 일·호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자위대와 호주 방위군 간 협력을 포함해 안보 및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

일본

그림 3. 호주 틴달 공군기지에 착륙한 일본 항공자위대



그림 출처: 時事通信, 2023년 8월 28일, 空自Ｆ３５が豪に飛来 円滑化協定を適用

출처 : [1] 外務省, 2023년 8월 8일, 日 豪部隊間協力円滑化協定の効力発生のための外交上の公文の交換 [2] 防衛省, 2023년 8월 14일, 日豪円滑化協定の初適用について [3] Asia-Pacific Defence Reporter, 2023년 8월 16일, Australia and Japan deepen defence ties [4] 時事通信, 2023년 8월 28일, 空自Ｆ３５が豪に飛来 円滑化協定を適用

아시아

일본

전문연구원 김주형

방위성, 2024년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요구 예산 공개

방위성은 8월 31일 2024년 요구 예산인 '방위력 발본강화 추진과 예산'을 공개했다. 방위력 정비계획이 발표된 지 두 번째 해인 2024년 예산요구액은 2023년 68,219억엔에서 2024년 77,385억엔(미군재편 등 비용 별도)으로 증액했다. '방위력 정비 계획 대상 경비에 대해서는 '방위력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소요금액을 산정한다'는 예산 요구 기준에 근거하여 계획기간 내 방위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도 중 착수해야 할 사업과 함께 작년 사업의 진척 상황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의 요구액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요구 예산의 방향은 「국가방위전략」(2021년12월16일 각의결정) 및 「방위력 정비계획」(2021년12월16일 각의결정)에 근거하여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있어서 중시하는 7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건조에 착수하는 동시에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무인기 방위능력 등 미래 방위력의 핵심이 되는 분야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가동수 향상이나 탄약 확보, 주요 방위시설의 강인화 투자도 계속 진행한다.

또 방위력을 '인력' 부문에서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 확보, 생활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을 통한 인적 기반 강화, 위생기능 강화 등을 계속 추진한다. 나아가 방위력 자체인 방위생산·기술 기반의 유지·강화를 위해 방위생산기반강화법에 근거한 조치를 포함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이나 민생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장비품의 대량 구매와 장기계약 등을 통한 효율적으로 보급한다.

표 3. 2023년, 2024년 방위력 예산 비교

(단위: 억엔)

구분	분야	2023년도 예산(A) (계약 기준)	2024년도 예산요구액(B) (계약 기준)	2023예산 대비 (B-A)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14,130	7,339	△6,791
통합 방공 미사일 방위능력		9,829	12,420	2,591
무인기 방위능력		1,791	1,161	△631

표 출처: 防衛省, 2023년 7월 1일, 防衛力抜本的強化の進捗と予算

아시아

일본

영역횡단 작전 능력	우주	1,529	1,145	△384
	사이버	2,363	2,185	△178
	차량, 함선, 항공기 등	11,763	13,787	2,023
지휘통제·정보관련 기능		3,053	4,488	1,435
기동전개능력·국민보호		2,396	5,951	3,554
지속성·강인성	탄약·유도탄	2,124	4,068	1,944
	장비품 등의 유지정비·가동확보	17,930	19,041	1,111
	시설 강인화	4,740	8,043	3,302
방위생산기반의 강화		972	886	△86
연구개발		2,320	2,321	1
기타 대책		5,149	5,182	33
교육훈련비·연료비 등		9,437	9,567	130
합 계		89,525	97,582	8,057

※ 방위력정비계획사업비(43.5조엔) 중 2023년도 약 8.95조엔, 2024년도 약 9.76조원 등 총 18.71조엔 상정, 2025~2027년 나머지 24.79조엔 상정 예정
※ 사사오입으로 실금액과 오차 있음

출처 : [1] 防衛省, 2023년 7월 1일, 防衛力抜本的強化の進捗と予算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중국 쉐룽 2호 북극 생태계 조사…14번째 북극해 항행

중국의 북극 조사선인 쉐룽(雪龍) 2호가 북극 생태계 변화 조사차 7월 12일 상하이에서 출항해 북극해 항행을 시작했으며 8월 17일 북위 84도 지점에 도착했다. 이는 쉐룽 2호의 4번째, 중국의 13번째 북극해 과학조사 활동이다. 이번 탐사는 북극해의 대기, 빙하, 해양 및 해저 환경 조사와 생물, 오염물질 조사 등을 수행한다. 쉐룽 2호는 9월 말까지 15,500해리를 항행한 후 상하이로 복귀할 예정이다. 탐사대는 북극 과학조사에 관한 중국과 외국 간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조사 기간 동안 러시아, 태국 등의 과학자들과 협력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현재 북극 탐사선인 쉐룽 1호와 2호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다. 이 쇄빙선들은 주로 남극과 북극에 있는 7개의 중국 과학연구기지에 공급품을 수송하고 극지의 빙상, 대기 구성, 환경 연구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쉐룽 1호는 1989년 설립된 중극극지연구센터가 1993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것으로 1999년 처음으로 북극 탐사를 진행했다. 쉐룽 2호는 중국이 처음 자체 개발한 쇄빙선으로 2019년부터 남극과 북극 항행을 시작했다.

그림 4. 북극에서 과학조사 활동 중인 중국의 쉐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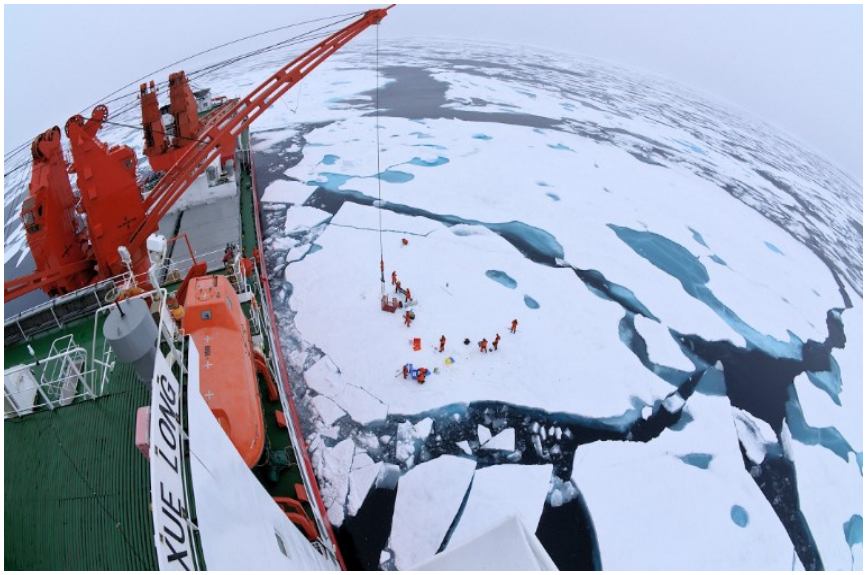


그림 출처: Polar Journal

아시아

중국

중국, 3호 쇄빙선 건조 착수…2025년 북극 해저 탐사 목표

한편, 중국은 최근 세 번째 쇄빙선인 쉐룽 3호 건조에 착수했다. 쉐룽 3호는 쇄빙선이라는 이름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다기능을 보유한 선박으로, 2025년에 건조를 완료하고 극지 해저에서 탐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선박의 설계는 러시아의 세베르니 폴류스(Severny Polyus)가 담당하기는 했지만, 철강재나 케이블 등 자재는 모두 중국 국산 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탐사선은 수행 임무 측면에서도 쉐룽 1, 2호와 차별성을 갖는다. 중국 심해과학원에 따르면 쉐룽 3호는 유인 혹은 무인의 심해 과학탐사에 특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쉐룽 2호의 설계를 맡았던 핀란드 설계회사 Aker Arctic은 "새로 건조되는 쉐룽 3호는 다중 얼음 위에서 연중 운항할 수 있으며 연간 1.5m 두께의 얼음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Polar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쉐룽 3호는 매년 극지에서 약 4개월 동안 체류하며 극지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남중국해와 기타 심해 수역에서 과학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새로운 북극 탐사선 제작에는 중국 하이난성 정부, 심해과학원 등이 자본을 지원하고 있다.

쉐룽 3호가 운영되면 중국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심해 유인잠수함을 사용해 북극 해저 과학조사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러한 기술력을 갖춘 국가는 러시아뿐이다. 현재 러시아는 40척이 넘는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세계 쇄빙선 수량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그림 5. 중국의 북극 탐사 쇄빙선, 쉐룽 1호와 2호



그림 출처: Polar Journal

아시아

중국

한편, 중국은 1980년대 말부터 북극 개발에 대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강국 건설 정책, 일대일로 등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에는 북극 개발 관련 정책들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중국은 북극해 연안국이 아니며 북극에서의 거리가 3,000km 가량 떨어져 있지만 스스로 '근(近) 북극 국가'로 규정하며 적극적으로 북극해 자원 개발, 북극항로 개척, 북극해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쉐롱호를 북극 항로 개발에 활용하기로 결정했으며, 2018년에는 북극 개발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체계화한 '중국의 북극정책 백서'를 발표했다.

표 6. 중국의 북극 관련 주요 사항

시 기	내 용
1989년	상하이에 '중국극지연구센터' 설립
1993년	우크라이나로부터 쇄빙선 도입해 '쉐롱 1호' 명명
1997년	북극과학위원회 가입
2002년, 2004년	스발바르드 제도에 북극연구기지 '황허' 건설
2009년	쉐룽 1호 북극점 경유 왕복 운항 성공
2012년 11월	'해양강국 건설' 정책 발표
2013년 5월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2013년 8월	중위안해운(COSCO) 북극 북동 항로 시험 운항 성공
2013년 9월	'일대일로' 발표
2015년 11월	국무원 산하 교통운수부, 「북극 항행 지도집」 출간
2017년 6월	국가발전과 개혁 위원회·국가해양국이 공동 발표한 '일대일로 건설의 해상 합작 구상'에 북극항로 개척 내용 포함
2017년 7월	시진핑, 러시아에 '빙상 실크로드' 합작 제안
2018년 1월	「중국 북극정책 백서」 발표
2018년 10월	아이슬란드에 북극연구기지 건설

그림 출처: Polar Journal

출처 : [1] 백영준 외(2020), 중국의 북극연구 경향 분석: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시베리아 연구, 제24권 3호 [2] South China Mornig Post, 2023년 6월 27일, "China starts building third icebreaker, which scientists say could send researchers to polar seabeds by 2025" [3] Michael Wenger, 2023년 6월 29일, China starts construction of its third polar-going vessel, Polar Journal [4] CGTN, 2023년 7월 25일, "China's Xuelong-2 icebreaker enters Arctic Circle for scientific expedition" [5]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18년 9월 11일, 雪龙2"号下水首艘"中国造"极地破冰船有哪些过人之处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 현욱

제3회 중국-아프리카 평화안전포럼 개최…해양안보 협력 강화키로

제3회 중국-아프리카 평화안전포럼이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베이징에서 중국 국방부 주최로 개최됐다. 중국-아프리카 평화안전포럼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아프리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해 2018년 시작되었으며, 2022년 7월에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2회 포럼이 열렸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글로벌 안보 구상 이행과 중국-아프리카 단결 협력 강화'였으며, 아프리카의 약 50개국 국방 부문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참가국들은 중국과 아프리카 국방부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아프리카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시대의 미래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8월 29일 기조연설에 나선 리샹푸 중국 국방부장은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세계에 더 많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참가한 아프리카 측 참석자들도 "중국-아프리카 협력이 대륙이 직면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이 제안한 글로벌안보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 GSI)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GSI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2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처음 제안한 후 2023년 2월 21일 중국 외교부가 공식 문건을 통해 발표했으며, 갈등 관리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중국의 정책 원칙을 골자로 한다.

그림 6. 제3회 중국-아프리카 평화안전포럼



그림 출처: Global Times

아시아

중국

GSI는 지역 안보 갈등이나 보호주의 확대 등 각종 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이 그러한 협력을 주도하고자 하며, GSI를 기반으로 각국 및 국제기구와 양자·다자 안보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아세안,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중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협력 분야는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분야를 아울러 다양한 영역이 포함돼 있는데, 특히 해양안보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다. 가령 중국과 이니셔티브의 참가국들이 라틴아메리카와 카브리해 지역의 평화 유지를 지원하고,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변화·자연재해·공중보건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 지원 확대, 해양분쟁 해결 및 해상 평화 유지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GSI 추진 과제에 포함된다. 실제로 중국은 GSI를 처음 제안했던 2022년 4월에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3년 2월에는 중국-이란 군사협력 확대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림 7. 아프리카 약 50개국 국방 관계자 참가



그림 출처: CCTV

중국·아프리카, '글로벌안보이니셔티브' 틀 아래 해양안보 협력 강화

한편, 이번 포럼에서도 해양안보와 관련한 양측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돼 눈길을 끌었다. 리샹푸 부장은 "아프리카 지역 안보 상황이 호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군사 쿠데타와 내전과 같은 전통적 안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며 테러와 불법 이민과 같은 비전통 안보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포럼에 참석한 세링 모두 엔자이(Sering Modou Njie) 감비아 국방부 장관 또한 "해양안보, 이주 등 아프리카의 수많은 안보 문제를 중국과 협력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환구시보

아시아

중국

(Glob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중국은 일찍부터 아프리카 지역 해양 안보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소말리아 주변 해적 문제나 인도양에서의 안정적인 해상교통로 확보 등이 중국 경제와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2016년 2월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 국가인 지부티에 최초로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해 현재 지부티 기지에서 군수물자 보급, 인도주의 구조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 내에서 자국 해군 기지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중서부 소재 적도기지에서 관련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8. 2018년 제1회 중국-아프리카 평화안전포럼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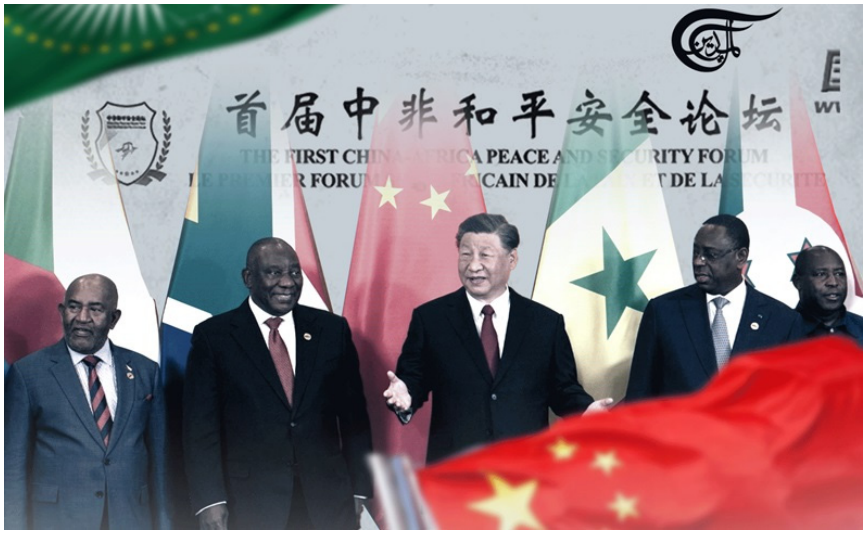


그림 출처: Al Mayadeen

출처 : [1] 김영선, 2023년 3월 7일, "[동향세미나] 중국, 글로벌 안보 공동체 구축 구상 발표,"CSF 중국전문가포럼 [2] Global Times, 2023년 8월 29일, "China-Africa to inject stability, positive energy to turbulent world: Chinese defense minister" [3] Michael Wenger, 2023년 6월 29일, China starts construction of its third polar-going vessel, Polar Journal [4] CGTN, 2023년 7월 25일, "China's Xuelong-2 icebreaker enters Arctic Circle for scientific expedition"

아시아
필리핀

전문연구원 이 서 희

필리핀, 서필리핀해 관련 상원결의안 채택

지난 8월 1일, 필리핀은 중국의 서필리핀해 침입을 규탄하는 상원결의안 718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과거 중국은 서필리핀해에서 필리핀과 빈번하게 충돌하였다. 가장 최근 사건은 지난 7월 초에 발생하였다. 중국 함정은 필리핀 군함의 약 90m이내에서 기동하며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규모가 더 큰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들이 이전부터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다. 또한, 7월 5일, 중국 해안경비대가 BRP 말라브리고 호와 BRP 말라파스쿠아 호를 공격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처럼 중국은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1] 서필리핀해에서 군사기지 및 인공섬 건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순찰 작전과 어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필리핀 선박과 어부들의 서필리핀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번 상원결의안 718은 필리핀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택안을 제시하였다. 이 선택안은 서필리핀해에 대한 필리핀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활동의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외교적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리핀은 이 결의안에서 자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는 유엔해양법협약과 2016년 남중국해 사건의 판정에 따라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무효화하고 필리핀의 권리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원결의안 718은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 및 기타 포럼에서 동일한 생각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중재판정 및 유엔해양법협약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결의안은 중재판정 이행을 목적으로 한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서필리핀의 실제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결의안은 중국이 필리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필리핀 어민, 해군 및 해안경비대에 대한 방해를 지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필리핀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하였다.

상원의원은 상원결의안 718 채택했다고 밝히면서, 서필리핀해 문제를

1) 2016년, 남중국해 사건에서 남중국해 동부 해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한다는 판정을 내림으로써, 중국을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필리핀이 승소하였다.

아시아

필리핀

유엔총회에 제기하는 선택안을 승인하였다.

출처 : [1] The Straits Times, 5 July 2023, Philippine Coast Guard says China harassed, obstructed resupply mission ships in Spratlys [2] Philstar Global, 2 August 2023, Senate OKs option of taking West Philippine Sea to UN Assembly

아시아
말레이시아

전문연구원 이 서 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의 해양경계획정 법안 발의

지난 2023년 8월 14일, 말레이시아 한 의원은 싱가포르 선박이 말레이시아 해역에 진입하여 현지 어부 4명의 어망을 의도적으로 손상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의원이 싱가포르와의 해양경계획정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사건은 조호르 해협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9. 조호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



그림 출처: blog spot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

과거 싱가포르 해협 우측에 위치한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미들 락스(Middle Rocks), 사우스 레지(South Ledge) 영유권에 관하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1979년 말레이시아가 페드라 브랑카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양국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2003년 2월 6일에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월 24일 이 협약에 따라 국제사법재

아시아

말레이시아

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였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에서 ICJ가 다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1840년 이전 페드라 브랑카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국이 페드라 브랑카에 등대를 건설하기 시작한 1844년 직전까지 이 섬이 조호르 술탄국의 영토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1844년 등대 건설 개시 이후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조호르 술탄국의 영유권이 영국으로 이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등대 건설이나 그 운영 과정을 검토했을 때 영유권 관련하여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일련의 사건을 통해 페드라 브랑카 영유권에 대한 조호르와 싱가포르의 견해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셋째,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싱가포르의 실효적 지배 여부를 분석하였다. 싱가포르는 1953년 이후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행사한 각종 주권 행위를 제시하면서 이를 영유권 근거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980년 전까지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이 싱가포르로 이전되었으며, 현재 이 섬의 영유권은 싱가포르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미들락스와 사우스 레지의 영유권을 검토하였다. 재판부는 미들락스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영유권 주장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우스 레지에 대해서는 양국의 해양경계획정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처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에서 ICJ는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싱가포르의 영유권을 인정하였고, 미들락스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CJ는 간조노출지인 사우스 레지에 대해서는 영해 경계획정에 따라 그 주권 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ICJ는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싱가포르의 영유권을 인정했을 때, 이 섬의 소유권을 부인했던 말레이시아의 공문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였다. 1953년 싱가포르는 영해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페드라 브랑카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말레이시아에 질의하였는데, 당시 말레이시아는 페드라 브랑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근거로 ICJ는 말레이시아가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주권을 포기했다고 간주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ICJ가 절충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한편으로 이 분쟁의 주된 대상이 페드라 브랑카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패소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페드라 브랑카에 관한 역사적 증거를 추가로

아시아
말레이시아

발굴하였고 2017년 2월 3일 ICJ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다만, 현재까지 ICJ 재심 사건에서 원래 판결이 번복된 경우는 거의 없다.

조호르 해협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지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에서 ICJ는 사우스레지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한편, 올해 8월 14일 사건은 조호르 해협에서 발생하였으나, 이 두 사건 모두 해양경계획정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번 사건은 앞서 언급한 말레이시아 의원의 주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외에도 통일말레이국민조직(United Malay National Organisation)[2] 소속 정치인은 싱가포르 경찰해안경비대가 조호르 해협을 마치 자국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하였다. 이 사건에 연루된 말레이시아 어부 파이잔 와히드(Faizan Wahid)는 싱가포르 선박으로 인해 자신의 어망이 손상되어 최대 700링깃(Ringgit,RM, 싱가포르 달러 204. 42)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싱가포르 경찰은 이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서술한 8월 20일 성명서에서 말레이시아 주장에 반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경찰은 8월 14일 오전 6시 55분 싱가포르 경찰해안경비대 장교들이 말레이시아 어선이 싱가포르 영해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싱가포르 경찰관들은 말레이시아 어선의 어부들과 교전을 벌인 후, 말레이시아 해역에 진입하지 않기 위해 후진하다가 싱가포르 경찰해안경비대 보트 프로펠러에 말레이시아 어부 4명의 어망이 걸렸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 어망을 프로펠러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망이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싱가포르 해안경비대 장교들의 주장은 싱가포르 영해 내에서 자국의 법을 집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의 코타 이스칸다르(Kota Iskandar)[3]주 하원 위원 판닥 아마드(Pandak Ahmad)는 9월 11일 의회에서 조호르 해협에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 해양경계를 다시 획정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해양 전문가는 과거 1995년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해상협정(1995 Singapore-Malaysia Maritime Agreement)이라는 국경조약을 체결했

2) 통일말레이국민조직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정당이다.
3) 코타 이스칸다르 주는 말레이시아 조호르 주의 행정 중심지이며 정부 소재지이다.

아시아

말레이시아

다고 하면서, 이 분쟁이 확대될 경우,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모두 유엔해양법 협약 당사국이기에, 이 협약 제287조에 따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ICJ, 국제해양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소에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5]

출처 : [1] cna, 20 August 2023, Singapore police refute allegations that coast guard entered Malaysian waters; Johor politician calls for remap of maritime borders [2] KMI, 7 February 2017, 말레이시아, 2008년 패소했던 싱가포르와의 영토분쟁 사건에 관한 재심을 ICJ에 청구 [3] 국제법 판례 통상법 해설 포털,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사건 (Singapore v. Malysia, 2008. 5. 23. 판결) [4] 김용환, "페드라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의 영유권에 관한 ICJ 판례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제53권 제2호, 2008

4) 1995년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해상협정에 따라 정의된 국경 밖에서는 양국이 공동 국경을 구분하기 위한 공식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1.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서면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수단중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a)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b) 국제사법재판소(c)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d)제8부속서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그 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판소"

중동
이집트

연구원 김 민

이집트, 수에즈만에서 새로운 유전 개발

그림 10. 수에즈만



그림 출처: Middle East Monitor

8월 22일, 이집트 석유부는 수에즈만의 Geisum 북쪽과 Tawila 서쪽 양허(Concession) 구역에서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유전은 수에즈만에서 개발되는 네 번째 유전이며, 현재 세 개의 다른 유전 또한 탐사 단계에 있다.

새로운 유전은 이집트 석유회사인 Cheiron 사의 GNN-11 유전 탐사 도중 발견되었으며, 하루 2,500배럴 이상의 석유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GNN 유전 채굴권의 지분은 Cheiron 사가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쿠웨이트 석유 탐사 회사(Kufpec)가 보유하고 있다. 이번 유전의 발견으로 오랫동안 주변국과 자원개발로 갈등을 빚어온 이집트의 향후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1] Reuters, 2023년 8월 22일, Egypt announces new oil discovery in Gulf of Suez [2] Middle East Monitor, 2023년 8월 22일, Egypt announces new oil discovery in Gulf of Suez, amid rising energy demands [3] Arab News, 2023년 8월 22일, Egypt announces new oil discovery in Gulf of Suez [4] Eqyptian Streets, 2023년 8월 23일, Egypt announces new oil discovery in Gulf of Suez

태평양도서국
파푸아뉴기니

전문연구원 민영훈

파푸아뉴기니(PNG) 대법원 PNG-미국 안보협정 적법성 검토

미국-PNG간 안보 협정

파푸아뉴기니(PNG)는 지난 5월 22일 포트 모레스비(Port Moresby)에서 개최된 미-태평양도서국포럼 기간 중 미국과의 안보 및 해양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PNG 국방부 장관인 윈 바크리 다키(Win Bakri Daki)와 미 국무장관인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이 양국을 대표하여 서명함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11.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제임스 마라페 PNG 총리 안보협정 서명



그림 출처: The Guardian

협정 서명 당시 PNG의 시민 단체와 대학생들은 이번 미국과의 협정이 PNG의 주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미·중간 경쟁에서 PNG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이 협정의 초안이 미 정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들에 대해 PNG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미군 및 관련 직원들에게도 면책권과 PNG 이민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 협정이 PNG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PNG를 포함한 많은 도서국들이 미·중간 경쟁을 통해 군사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PNG의 시민 사회와 학생연합은 이 협정이 이러한 군사긴장을 더욱 고조시

태평양도서국
파푸아뉴기니

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정 서명을 주도한 PNG 총리 제임스 마라페 (James Marape)는 현재의 협정이 PNG의 국방력을 개선하고 PNG 해역에서 불법 조업, 마약밀수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언급하며, 이 협정은 1989년 미국과 체결한 SOFA 협정을 격상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중국은 미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의 PNG 방문과 협정 서명에 대해 미국이 PNG에 '지정학적 게임(geopolitical games)'을 도입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PNG 야당 총수 대법원에 미 안보협정에 대한 합법성 검토 요청

협정에 대한 많은 우려와 함께 최근 PNG 야당 총수 조셉 렐랑(Joseph Lelang)은 협정에 관한 자국 내의 불만을 강조하며 이 협정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PNG 대법원의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5월 서명된 이 협정이 PNG 의회에서 비준될 경우 미군은 PNG의 항구와 공항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PNG에 있는 미군에 관한 형사관할권 또한 미국이 가지게 된다. 이에 PNG 야당 총수는 이 협정이 PNG 헌법에서 정하는 주권과 합헌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PNG 야당 총수는 8월 24일 목요일 PNG 대법원에 이 협정의 적법성 검토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미국-PNG간 안보협정의 향후 전망

미국-PNG간 안보 및 해양협력에 관한 협정은 서명만 되었고, PNG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 발효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PNG 대법원에서 협정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협정의 발효가 연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간이 PNG에게 협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협정을 거부할 환경을 조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사실 다수의 태평양 전문가들은 이 협정의 효과가 많은 부분 PNG 국민들에 만족할 수준으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 협정은 PNG의 항구 및 공항 이용 외에도 PNG의 집행 공무원이 미 연안경비대와 미 해군의 함정에 동승하여 불법 조업을 함께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반대로 이 협정은 미 해안경비대와 미 해군이 PNG 집행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PNG가 보유한 함정에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태평양도서국

파푸아뉴기니

근거를 제공한다. 뿐만아니라 블링컨 장관은 이 협정을 통해 PNG가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초국경범죄를 억제하고, 공중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서 45백만달러(미국)를 제공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체결 가능성에 대해 일부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과거 PNG 대법원은 호주와의 협정에 의해 설립된 PNG 소재 호주의 난민·망명자 센터를 폐쇄하도록 명령한 바가 있다. 또한 현재 PNG 총리 마라페의 불신임 유예 기간이 내년 2월에 종료되는데, 이럴 경우 PNG 야당은 내년 2월 이후 현 마라페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언제든지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마라페 총리는 내년 2월까지 미국과의 협정에 대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협정에 대한 비준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마라페 총리는 미국과의 협정의 목표가 PNG에서 어떻게 달성이 될 것인지 또는 PNG의 경제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협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미-PNG간 협정의 비준은 현 PNG 정권에서 협정의 내용을 얼만큼 공개하고 대중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정의 목적을 투명하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 야당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1] RNZ, 2023년 8월 30일, PNG opposition seeks Supreme Court review of US defence pact [2] The Guardian, 2023년 5월 22일, US and Papua New Guinea sign pact amid Pacific militarisation concerns [3] VOA, 2023년 5월 22일, 미국-파푸아뉴기니 안보협정 체결

태평양도서국
팔라우

전문연구원 민영훈

팔라우, 미국과 해상보안에 관한 새로운 협정 체결

팔라우-미국 해상보안 협정 체결

지난 8월 23일 팔라우는 미국과 해양안보에 관한 새로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미 해안경비대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팔라우 관할해역에서 법집행을 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이 협정을 통해 미 해안경비대는 팔라우 관할 해역에서 팔라우의 관계 공무원의 승선없이 불법어업(IUU어업), 외국선박의 위법활동 등을 단속할 있게 된다. 이 협정은 2022년 미국과 마이크로네시아가 체결한 해양안보협정을 벤치마킹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팔라우는 이 협정을 통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감시하고, IUU어업을 예방하며, 자국 해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모든 선박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림 12. 팔라우-미국 해양안보협정 서명



그림 출처: United States Coast Guard News

협정 체결 배경

이번 협정의 체결을 주도한 팔라우 대통령 수랑겔 휩스 주니어(Surangel S. Whipps Jr.)는 2021년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함 이래 3척의 중국

태평양도서국

팔라우

선박이 팔라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국 관할해역에 진입했다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특히, 휩스 대통령은 중국이 자국 관할 해역에 대한 접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이는 팔라우가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휩스 대통령은 자국 관할 해역에서 중국의 향후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과의 해양안보 협정을 추진하였다.

반면 협정의 상대 기관인 미 해안경비대는 팔라우와의 협정을 통해 인접 해역에서의 자원 보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하면서, 특히, 미 해안경비대는 우방국의 해양 안전 및 안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위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자원을 투자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미 해안경비대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관련된 모든 국가들이 해양 관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림 13. 필리핀 해역에서 미 해안경비대와 중국 해경의 대치



그림 출처: abcNEWS

팔라우-미국 해상보안에 관한 협정 서명의 함의

미국은 지난 2022년 이후 태평양 도서국들과 양자간 해양 안보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마이크로네시아와의 해양 안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2023년에는 파푸아뉴기니(PNG), 팔라우 등과 해양안보와 관련된 협정에 서명했다. 이들 협정은 대부분 미군 또는 미 해안경비대가 상대국의 항구 및 공항을 이용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협력 또는 미 해안경비대 단독으로 상대국의 관할해역에서 미 해안경비대가 해양 관련 법집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태평양도서국

팔라우

하고 있다.

다만, PNG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이러한 협정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중간 안보 경쟁에서 자국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러한 협정 체결을 반대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이들 협정이 단순히 안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상대국의 해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적 지원 또한 약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협정이 종합적인 경제·안보 협력의 예라고 언급한다.

사실 대다수 외신 및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해양 안보 협정 확대가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자유롭고 열린 태평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안보 협정의 확대는 거시적으로 미·중간 안보 경쟁의 일부분이며 미·중간 군사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정책은 최근 주춤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에 비해 미국에게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태평양 도서국과의 향후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1] abcNEWS, 2023년 8월 29일, US given OK to enforce maritime law around Palau as Washington vies with China for Pacific influence [2] United States Coast Guard News, 2023년 8월 29일, US and Republic of Palau sign agreement to strengthen ties with new chapter in maritime security and stewardship in the Pacific.



3개월 내 행사계획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자 대회

10월 20일(금)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주최** 대한국제법학회

2023년 ISA 제3차 이사회

10월 28일(토) ~ 11월 8일(수) / 자메이카 킹스톤

- **주최** 국제해저기구
- **주요 내용** ISA 예산 및 법률기술위원회 안건 심의, 기타 ISA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한국해로연구회 해양정책세미나

11월 16일(목)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

- **주최** 한국해로연구회
- **주요 내용** 국제사법재판소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 판결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 검토

한국영토학회 추계학술대회

11월 17일(금) / 한국프렌스센터

- **주최** 한국영토학회